



중단 없는 디지털정부 위한 후속조치 점검

-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 -

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1월 29일(수)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*와 함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후속대책을 점검했다.

* (주요참석자) 행안부 차관,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·네트워크정책실장, 교육부 차관보,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,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, 국정원 안보정책실장,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

○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(11.17)*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몇몇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가 지속 발생해 온 것이 이번 회의의 배경이다.

* 11.25(토), 장애 원인분석 최종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방향 발표(행안부)

○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,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.

□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전산망 장애의 예방-대응-복구 쉰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,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.

○ 재발방지대책은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고, 그 중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.

○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은 지난 26일부터 노후, 불량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고, 필요하다면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. 장애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대응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.

-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- 한편, 각 부처는 사용자수가 많고,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338개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해 연내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-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, 과기정통부, 행안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찾기로 하였다.
 -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정보화혁신TF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온 바 있다.
- 이와 관련,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“‘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’ 등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온 규제들부터 신속하게 개선하겠다”고 밝혔다.
 - 국조실은 해당 규제개선을 위해 상당 기간동안 과기정통부와 함께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.
- 한편, 이번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.
 -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자체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, 과기정통부, 국조실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점검·관리해 나가고,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점검·대응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정운영실	책임자	과 장	천영평 (044-200-2092)
	일반행정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송지영 (044-200-2095)

